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86
----------	------

발의연월일 : 2024. 12. 30.

발 의 자 : 강선우·임오경·박해철
김성희·김윤덕·서미화
김교홍·정태호·추미애
임호선·전현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아직 빈약한 상태이며, 가족돌봄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과 취업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당수 영케어러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년이 가족돌봄과 학업·사회생활 병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규정에 필요한 주요개념으로서 “가족돌봄아동·청년”, “돌봄대상가족”, “사례관리 지원” 등을 정의함(제2조).

- 1) “가족돌봄아동·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
- 2)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함.
- 3) “사례관리 지원”이란 가족돌봄아동·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지원을 말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실시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본인 동의를 얻어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 라.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아동·청년 복지 분야 전문가 등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9조).
- 마.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센터의 장은 실태조사 또는 학교, 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지원필요아동·청년에 대해 직권으로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초기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 바. 지원필요아동·청년 또는 그 동거 친족은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센터에 사례관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초기상담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 지원필요아동·청년이 사례관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돌봄대상가족 요건 등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
- 아.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센터의 장은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해 향후 자립계획, 돌봄·간병·주거·건강·일자리 관련 공공·민간 서비스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사례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 종결 시까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안 제15조).
- 자.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학업·취업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및 임대보증금 지원, 자기돌봄비 및 그 밖에 특별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차.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활용, 학교생활기록 및 주민등록자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 활용, 가족돌봄아동·청년 정책센터 등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년이 가족돌봄과 학업·사회생활을 병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아동·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대상가족”이란 가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중 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3. “사례관리 지원”이란 가족돌봄아동·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에 대해 개인별 또는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지원을 말한다

4. “지원필요아동·청년”이란 가족돌봄아동·청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지원필요아동·청년 중 사례관리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지원센터”란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① 가족돌봄아동·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은 인간다운 삶의 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가족돌봄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아동·청년 본인과 돌봄대상가족의 이익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가족돌봄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법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아동·청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4.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제9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중에 지원필요아동·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그 지원필요아동·청년의 이름,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등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

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제2항에 따른 지원필요아동·청년의 개인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가족돌봄아동·청년정책위원회) ①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아동·청년 복지 관련 단체의 장, 아동·청년 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가족돌봄아동·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족돌봄아동·청년 발굴 및 지원

제11조(지원필요아동·청년 발굴·상담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굴 아동·청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관리 지원 여부 결정에 필요한 발굴 아동·청년의 가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 직권으로 제13조에 따른 초기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지원필요아동·청년으로 발굴되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진료·상담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원필요아동·청년으로 판단하여 지원센터에 사례관리 지원을 요청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라.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마.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필요아동·청년 발굴과 관련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필요아동·청년의 발굴·상담·신청·접수 등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 온라인 등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례관리 지원 신청) ① 지원필요아동·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센터에 사례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초기상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사례관리 지원 신청을 한 지원필요아동·청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온라인 또는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초기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원필요아동·청년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및 거주환경
2. 지원필요아동·청년 가구의 주요 소득원, 가계지출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3. 지원필요아동·청년이 돌봄대상가족을 돌보는 데에 드는 시간
4. 지원필요아동·청년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초기상담 실시 결과 지원필요아동·청년 가구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지원필요아동·청년 가구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필요아동·청년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초기상담 실시 결과 지원필요아동·청년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그 가족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초기상담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동의를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원필요아동·청년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다.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또는 그 밖에 심신쇠약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2. 돌봄대상가족과 지원필요아동·청년 본인 외 35세 이상 다른 가
족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장년 가구원이 있더라
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필요아동·청년이 사실
상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3. 돌봄대상가족과 지원필요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가 일치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대상가
족과 지원필요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지원필요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
이 제한될 것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례관리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적절
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종결할 때까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초기상담 결과

2. 지원대상자의 향후 진로 및 자립계획

3. 주거·금융·법률·교육(공공·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건강·

일자리 분야 공공·민간서비스의 지원·연계 계획

4.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공 계획

5.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 간병 및 의료분야 공공·민간서비스

등 지원·연계 계획

6. 그 밖에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한 지원·연계 계획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 및 각종 공공·민간서비스(대출이나 그 밖에 비용이 부담되는 계약 행위 등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수반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지원대상자 및 그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현황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지원계획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계획의 종결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심리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사례관리를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

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18조(학업지원 및 취업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습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관 장학금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19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부여,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 관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종류, 지원대상·기준·방법·절차 등 관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기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 및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우선 지원
 2. 지원대상자 가족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3. 지원대상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 ③ 제1항 따른 자기돌봄비의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의 선정기준과 지원 범위·방법·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기반 조성

제21조(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에 따른 지원필요아동·청년의 발굴 및 상담 등
2. 제12조에 따른 사례관리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제13조에 따른 초기상담
3. 가족돌봄아동·청년 사례관리 지원
4. 가족돌봄아동·청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5.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관련 홍보
9.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가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필요아동·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 또는 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족돌봄아동·청년의 발굴,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가족돌봄아동·청년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원센터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가족돌봄아동·청년의 발굴,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2.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전자의무기록
 3.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이력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요청 범위, 요청 절차, 보유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가족돌봄아동·청년 정책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지원센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가족돌봄아동·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4.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가족돌봄아동·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발굴체계 구축

6.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5장 보칙

제26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 실시지역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이 법에 따라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 또는 정책센터가 아니면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센터, 가족돌봄아동·청년 정책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센터, 가족돌봄아동·청년 정책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